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74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17.

발 의 자 : 성일종·강선영·조 국
고동진·인요한·유용원
박덕흠·이헌승·송석준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·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하고,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이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,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 삭제 등).

법률 제 호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5년마다”를 “3년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
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6조(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) ①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 · 군수 · 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 · 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시설물의 용도변경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
<p><u>2.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7조(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<u>5년</u>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7조(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<u>3년</u>마다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--	--